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3월 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 ·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실시
- 구인광고 성차별 유무 모니터링(2021년 1천 개소),「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운영,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지속 추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1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53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9년의 1.7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밝힘.

이는 전년대비 약 68.4% 증가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19년 95,083건 → '20년 158,760건)한 데 따른 것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1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52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 ·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힘.

-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64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발표

우리나라 국민이「통계법」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1. 1. ~ 12. 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혼인·이혼통계가 발표됨.

- 혼인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2만 6천 건)했으며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감소
-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4천 건)했으며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03.1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868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제고하고, 청소년 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만 4천여 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 ~ 만 18세)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상 지원 대상 확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77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법 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등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LOIOMSBlledyLm+xHOORBgc0.mogef11?mid=news405&bbtSn=707679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등은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의 예방교육 참여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도 강화되는 한편,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로 명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78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사회서비스 이용권 단일 체계 운영

보건복지부는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힘.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4222

2020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

- 2020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
- 2019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으로 '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었으며 2020년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1.2%,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6.8%로, 각각 2년 전 대비 3.1%p, 0.1%p 증가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03.2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779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예산 71억 편성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이 3월 25일(목)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2021년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은 본예산(1조 2,325억 원) 대비 71억 원(0.6%) 증가한 1조 2,396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80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1-03-12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안 제15조의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2021-03-15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 강화(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제121조·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2021-03-15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개선(안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85조의2, 제85조의3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2021-03-15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2021-03-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여성노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1-03-12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이바지(안 제10조제3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2021-03-22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 강화(안 제7조, 제32조 및 제37조)
건강·재생산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2021-03-11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안 제15조의18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1-03-24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젠더폭력·안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1-03-11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 대응 강화(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2021-03-1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1-03-15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2021-03-17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안 제35조 및 안 제35조의3 신설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2021-03-17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또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119구급대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추가(안 제3조제4항 신설,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2021-03-19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2021-03-22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2021-03-22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27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2021-03-23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2021-03-23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 배치(안 제5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2021-03-23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안 제33조의2 신설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2021-03-23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안 제1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2021-03-24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1-03-24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및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제17조, 제18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2021-03-24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제31조의3 신설,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2021-03-24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1-03-24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이라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안 제3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2021-03-25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안 제1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법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권인숙의원 등 18인)	2021-03-25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 교육 기회 제공(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코로나19 1년 여성노동자 일자리 변동 현황	3.10	여성신문	20대 여성 약 3명 중 1명, 코로나로 퇴직 경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88
	3.12	한국일보	저출산이 말하지 못한 것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108260000986?did=NA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3.11	뉴시스	청년들 성별갈등 어쩌나…女 75% "여성차별"vs. 男 51% "남성차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6188&cID=10201&pID=10200
	3.11	아시아경제	청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할 수도 있다"…男 생계, 女 가족관계 부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100200518870
	3.11	연합뉴스	"청년 여성 셋 중 한 명, 지난 1년간 자살충동 한 번 이상 느껴"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58800530?input=1195m
			[그래픽] 청년 자살충동·결혼 등 주요 조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GYH20210311000200044?input=1363m
	3.11	한겨레	"한국사회서 내 성별이 불평등" 여·남 모두 50% 넘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6295.html
	3.11	한국일보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 51.7% vs 여성 7.7% '찬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016480003295?did=NA
	3.11	MBN	"청년 여성 셋 중 한 명, 지난 1년간 극단적 충동 한 번 이상"	https://www.mbn.co.kr/news/society/4445649
	3.11	중앙일보	"집안일 당연시, 암묵적 화장 요구" 女 10명 중 7명 "사회 불평등"	https://news.joins.com/article/24009353
	3.11	경향신문	청년 여성 75% "여성이 불평등"…청년 남성 52% "남성이 불평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0842001&code=940100
			젊은 여성 3명 중 1명 "죽고 싶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2045025&code=940100
	3.11	서울경제	골깊어지는 젠더갈등…2030 남녀, 서로 "우리가 불리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M3IUXV
	3.11	세계일보	성차별·성희롱에 범죄 피해 우려… 여성 청년 우울 부르는 사회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1509792?OutUrl=naver
	3.12		결혼 왜 꺼려지나요… 달랐던 남녀 대답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1516613?OutUrl=naver
	3.12	조선일보	女 75% "여성에게 불평등" 男 52% "남성 역차별당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2/QUGLY5IBFJAE3MRVL55ZBT5VQ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3.12	여성신문	청년 여성 3명 중 1명 "자살 충동 느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2
	3.20		[젠더마이크] 서울시장 선거에 '청년여성'은 없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6
	3.14	SBS	요즘 청년들 "굳이 결혼할 이유가 있나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9718
	3.23	조선일보	[NOW] 2030세대 53% "아이 낳을 생각 없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23/ZQHJYJK4GBGLPFSUPEFC2INQZ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3.11	한겨레	망가진 난자? 바꾸자, 유산 책임 여성에게 떠넘기는 의학용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6340.html#csidx20065c2874df0a88d6e46d94520c0c8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연구 Ⅱ : 저출산 대응 담론의 재구성	3.18	내일신문	성차별 느끼는 청년여성 60% "자녀 안 갖겠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0195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3.12	뉴스1	젊은 여성 3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충동… 남성보다 크게 높아	마경희 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4238757
3.12	한겨레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처벌 가능할까?	구미영 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6593.html
3.15	대한전문건설신문	[취재파일] 면허 정지에 출국 금지까지…양육비 문제에 얼마나 도움 될까?	김경희 선임연구위원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07
3.16	CBS노컷뉴스	"그 질문도 '성차별'입니다"…손놓은 노동부, 차별하는 회사	구미영 연구위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516523
3.17	아시아경제	"군대 갈 생각 있나" "결혼 생각은?" 채용과정 성차별적 질문, 이대로 괜찮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611333449526
3.18	경향신문	청년 남성 절반은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플랫]	마경희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81453001&code=940100
3.19	여성신문	[젠더위원회, 서울시장 후보에 말한다] "젠더 의제 관심 낮아… 채용 성차별·젠더폭력 문제 살펴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04
3.19	KBS	부성 우선 원칙 폐기될까?…법 개정은 16년째 제자리	송효진 연구위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3378&ref=A
3.25	서울경제	[단독]9억 내주고 2,000만원만 받은 여가부...양육비 구상권 '있으나 마나'	박복순 연구위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Y0UXVAB
3.25	오마이뉴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송효진 연구위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25	한겨레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의 성 주류화	마경희 연구위원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067.html

유관기관 연구동향

돌봄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돌봄종사자 권익침해 문제 해소,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21.03.24.]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35744